

보도시점 2026. 6. 15.(월) 배포 즉시

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 방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6. 15.(월) 한겨레, “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...이재명 정부서 ‘양성화’ 검토”
“신분 없이 한국에서 27년...“매순간 무서웠다” 관련

- 노동부는 고용허가제(E9) 개편과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, 숙련 수준이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. (중략)
- 고용허가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양성화 길을 터준다는 방향이다. (중략)
-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(TF)를 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·사 대표,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, 관련부처와 함께 '25.12.~'26.2.까지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를 운영하였으며,
- 미등록 이주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) 합법화 필요성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법무부 등과 청취한 바 있음
- 미등록 이주노동 정책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결정한 바 없고,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음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현 (044-202-7145)